



부동산 투자 절세가 핵심

“기부문화 참여 확산을 상반기 제도 마련”

보유세 피하려면 6월이전 매각·증여를

2주택자 선별 매각엔 양도세 증가 피해 ‘1억이하’는 누진세율 9~36%로 과세

2007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발표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고 고가주택이 많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늘고 재산세는 내년부터 5%씩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 해가 갈수록 주택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 세율로 증가되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가격상승률 및 보유세, 대출금 이자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시 발생하는 자산을 타 투자자산으로 이전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투자방식을 선택해야한다. 실제 재무상담을 하다가 보면 부동산 세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매각시기나 매각방법을 잘못 선택해 양도소득세가 필요이상으로 과세되었던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50% 이상 내야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비과세되거나 9~36%의 누진

세율로 과세 되었을텐데 말이다. 부동산 매각시 절세가 중요한 이유다.

다주택자중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6월 이전에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이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 또는 매각하려는 주택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 증여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을 때에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증가되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1세대 3주택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세대 2주택의 경우 증가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즉,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1세대 2주택 증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런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증가세되는 것이 아니라 9~36%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광주에 공시가격 1억 초과 주택과 1억 미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억 초과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50% 세율로 증가세하지만, 1억 미만의 주택을 먼저 팔면 9~36%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이를 감안해 관계부처간 국내 보완대책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존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의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경쟁력 강화대책과 약간의 제도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다만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택배맨 하루에 걷는 양은?

1만8천보... 직장인의 3.4배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5천보 정도를 걷는 반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택배사원들은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

22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택배 배송 담당 사원은 1주일에 최저 76km 이상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운이 최근 서울강북사업소 중구팀 소속의 택배 사원에게 만보계를 부착하고 매일 걸음 수를 기록한 결과, 평균 1만8천보를 기록했다.

택배업 사원들이 가장 덜 바쁜 날로 꼽는 월요일이 1만7천보. 가장 바쁜 수요일에는 2만3천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원이 뛰어다닌다는 점을 감안해 걸음 보폭을 일반인보다 약간 넓은 0.7m로 설정해 거리로 환산했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가 3천보, 직장인이 5천보, 외근영업직이 8천500보, 자가용 사용 최고 경영자가 550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배 사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3.4배 가량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새로 택배업에 입문한 사람은 첫달에 통상 10kg 정도 체중이 줄어들고 웬만큼 튼튼한 운동화가 아니면 두 달도 못가서 망가져 버릴 정도로 신발만만큼 비싼 것으로 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소득세 복식부기 의무화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월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기존에는 영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됐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문판매 과도한 위약금 요주의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등 설치후 반품시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 등 실내 청소 및 환기와 관련된 제품을 설치, 판매하고 고가의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문판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들 3개 제품의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751건으로 2005년 590건에 비해 27.3% 증가했다.

제품별로 보면 지난해 진공청소기 관련 소비자상담이 4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211건,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 58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에는 66건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원들은 청소업체를 빙자하거나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진공청소기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부실 우려

올해 원금상환 포함 100조 만기도래

DTI 규제 강화 ‘갈아타기’도 힘들어

LG경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레임워크 안착을 위한 보고서’에서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올해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1조9천억원,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49조6천억원이나 돼 우리 가계는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부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

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결과 동일한 담보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상환시기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며 “결국 상환해야하는 대출 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 등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4년 12월 3.39%이던 3개월 만기 CD금리는 올해 2월 4.95%수준으로 상승해 CD금리 연동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가계라면 향후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2년사이 156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해남군·농림부 “3월에 김장하세요”

해남군 겨울배추생산자 단체가 서울시 중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설치한 배추 조형물을 22일 행인들이 구경하고 있다.

해남군과 농림부는 겨울배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월 김장 담그기’운동을 벌이는 한편 24일 이곳에서 김장배추 나눔주기 행사를 한다.

(해남군제공)

韓銀도 ‘무능 5%’ 퇴출

근무성적 5회 최하위뎀 감봉·명령휴직 조치

상반기부터 ... 국책銀·금융기관 영향 미칠듯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시샘을 받아온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팀장·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보직에서 배제하고 강등 조치까지 취해진다.

중앙은행으로서 직무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한은이 이러한 퇴출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퇴출시스템이 여타 국책은행과 공공성이 강한 금

융유관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은은 우선 근무평가에서 3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

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서이동과 함께 승진·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진다.

물론 본인이 명령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고자 한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한은 내부의 평가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k1080클링, 매일식품, 시시한국호텔지사, etc.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경제 5단체 ‘투명경영 실천 계획’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등 3개 부문에 걸친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올해 윤리경영의 실천목표를 기업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두고 기업윤리교육의 저변 확대와 모범사

례 전파에 노력하는 한편 업종별로 윤리경영의 실행 점검과 진단지표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정련은 지방소재기업으로 윤리경영을 확산하고자 지역순회기업윤리학교를 2차례 열며 기업윤리담당 임원들이 참여하는 ‘선진 윤리경영 해외 연수단’을 미국서부지역에 하반기중 파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